

청년 창업가 만난尹 “기업활동, 정치에 휘둘리면 안돼”

윤석열 ‘민심투어’ 두 번째 행보
혁신창업 도전 스타트업과 간담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

“역동성’ 국가 경제서 가장 중요
경제의 역동성 위해 자유 줘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국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라고 붙인 민심투어 두 번째 행보 차 청년 창업가들과 만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기업 활동이 정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많은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일 민심투어 첫 번째 행보로 대전 카이스트에 방문, ‘탈원전 반대’ 입장을 부각한 바 있다. 이어 두 번째 일정에서는 ‘청년 창업’ 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 단지 ‘팁스타운’을 방문, 청년 창업가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지금의 많은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대

기업 등) 커나가는 과정의 시작은 스타트업에서 이뤄졌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에서 윤 전 총장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동성’”이라며 “경제의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역동성은 자유와 창의

라며 “어떤 이야기, 시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바탕이 돼야 경제의 역동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20~30대 청년층 중심으로 ‘공정’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줘야 한다’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년 창업가인 스타트업 대표와 만난 윤 전 총장은 ▲네거티브 규제 필요성 ▲청년 자산 형성 위한 스톡옵션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보완 ▲창업자 세제 혜택 ▲주 52시간제 및 최저 임금제 등 현장 목소리도 경청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청년 창업가와 만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규제와 법령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규제와

감독하는 조직이 생겨난다. (규제 필요성이) 상실됐는데도 폐기하기 어려운 게 많다”며 “그 부분을 잘 살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인력 충원 문제와 관련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우수 자원이 충원될 것”이라며 스톡옵션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스톡옵션 거래가 원활하게 중개가 잘 되면 자신의 창의와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돼 좋은 인력이 (스타트업에) 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총장이 방문한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아래, 세계 시장 선도 기술 아이템 보유 창업팀을 민간 주주로 선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간담회에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경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 장지호 닥터나우(헬스케어) 대표, 남성준 다자요(공유숙박) 대표, 김기동 코나투스(반반택시) 대표, 김세영 서울거래소(스톡옵션) 대표, 정호정 케이아이컴퍼니(헬스케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절체절명 고비... 방역에 국민 총력 모을 때”

김부겸 2차 추경 국회 시정연설
힘든 시기 사투 중인 국민 위해
33조 2차 추경 조속 처리 당부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에 국민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지금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단계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임하고,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지경에 있다.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우리의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

며 “정부는 국민께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2차 추경에 ‘소득 하위 80%’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일부 반발 여론에 대해 “최소하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여러분의 뉘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에게 보다 두텁게 없어 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정책과 관련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원의 한계도 있다. 더 어렵고 더 급한 분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15조7000억원) ▲방역·백신(4조4000억원) ▲고용조기회복·민생 안정(2조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2조6000억원) 등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5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8000억원 등 재원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국회는 이날 김 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해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할 바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도쿄올림픽, 성과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이철희 靑 정무수석
文, 日 방문 가능성 일축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일본 방문 여부에 대해 “아무 성과 없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 성사’라는 성과 없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일축한 셈이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외교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 지서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여부와 관련 “외교라는 게 알다시피 물밑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어떤 행위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인지 않나.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능성을 단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기왕에 가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겠다. 한일 현안 관련 ‘갈등이 풀리는 성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아니겠냐”며 같은 입장을 말한 바 있다.

이 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고관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착잡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이들의 정치 행보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과정에서 이 수석은 “저희끼리 농담은 ‘코드 인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가 정말 폭넓게 이뤄진 게 이런 것으로 확인된 거 아닌가’라는 농담을 한다만 착잡하다”며 “그러나 그분들의 선택이고, 정치의 영역에 저희가 개입할 수 없어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이 수석은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 힘 보좌진협의회가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파격이 아니라 코미디’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전적으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지휘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검·경·언론계 인사 등에 대해 금품 제공 혐의가 있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무상 제공 의혹을 받고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이번 건 때문에 사퇴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본인은 이전부터 피로감을 호소하며 사직 의사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